

# 찬양일색에서 말꼬리 잡는 비판으로 변해

역대 대통령 보도와 청와대 기자실 변화

성한용 · 한겨레신문 부장급 현장기자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가운데 정치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그 이전의 시대와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달라졌다. 우선 언론이 현직 대통령을 거의 무제한 비판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기사 내용에 대해 청와대나 문화관광부에서 언론사에 과거처럼 압력을 가하는 일은 불가능해졌고, 그 대신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하는 일은 예삿일이 되었다.

대통령이 기존 언론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에 편지를 띄워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거나, 청와대 비서관들이 인터넷을 통해 기존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논조를 비판하는 일도 많아졌다.

학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정치 권력과 언론의 관계, 그리고 그 변화를 연구과제로 삼아 실태와 배경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계를 축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치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라는 출입처를 출입기와 데스크로 경험한 현직 언론인의 시각에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착안점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 김대중 대통령과 비서실 출입 제한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곧바로 출입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을 금지시켰다. 청와대 취재 시스템을 이른바 백악관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브리핑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기자들은 반발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른바

‘백악관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할 ‘실력’도 되지 않으면서 비서실 출입을 지지하는 것은 취재 봉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백악관에서는 대변인이 국정 현안을 소상히 파악한 상태에서 브리핑에 임한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 누가 드나드는지 일상적인 감시가 이뤄진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3월 6일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대표단을 보내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고, 4월 4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출입금지 해제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답이 없었다. 마침내 4월 15일 출입기자단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첫째,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 둘째, 책임있는 당국자가 공식 입장을 밝힐 것, 셋째, 청와대의 향후 조치를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등 세 가지 결의 사항이 담겼다.

당황한 청와대는 기자단과 절충에 나섰다. 그 결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한 시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하루 두 차례 기자들의 비서동 출입을 허락하되,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사무실 취재로 제한한다는 약속이 이뤄졌다. 이 약속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까지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비서실 취재 원칙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오후 4시에 비서실로 넘어가 퇴근 시간까지 비서동에 머무르는 기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기자들도 점차 늘어났다. 원칙이 느슨해진 것이다. 이른바 ‘백악관 시스템’은 자연히



노무현 정부의 과제로 넘어갔다.

### 연고주의 취재 여전

청와대 비서실 출입 문제를 제외하면, 김대중 정부에서의 청와대 취재 관행은 그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정권의 언론 통제 시스템과 관행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보수석비서관, 국내언론비서관 등은 언론사 사주나 간부들을 자주 만나 정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중요한 정보를 특정 언론사에 흘리는 ‘언론 플레이’도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전날 저녁 발행되는 조간신문 가판을 미리 보고, 아침 판에 불리한 기사를 빼 달라거나, 제목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가끔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일도 잦았다. 하는 쪽은 ‘부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는 쪽은 ‘압력’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은 취재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제대로 쓰기가 어렵다. 비판을 받은 취재원은 그 기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할 수 있기

사주가 있는 신문사의 경우 기자로서 능력도 능력이지만, 사주의 신입이 중요한 선발 요인이었다. 정권의 향배를 빨리 읽어내 회사에 보고해야 하는 '첨병'의 책무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지고 있었다. 때로는 회사나 회사 간부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때문이다.

연고주의 취재 관행도 여전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고려대 출신이 유난히 많았다. 청와대의 '실세'였던 이원종 정무수석비서관이 고려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출신 지역은 부산·경남이 많았다. 비서실에 부산·경남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호남 출신들이 많았다. 청와대에서 힘깨나 쓰는 실세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대개 호남 출신이었던 탓이다. 기자실에는 호남 지역 명문고인 광주일고, 전주고, 목포고 출신들이 꽤 많았고, 이들은 청와대 주변 식당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학교 선배들과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종의 '특혜'를 누렸다. 연고가 없는 기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가.

### 브리핑룸으로 개편

김대중 정부를 승계한 노무현 정부는 언론의 취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초기부터 대단히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청와대는 우선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완전히 개조했다. 김대중 정부까지 사실상 이어졌던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해체한 것이다. 출입 기자들을 대표해 연락 업무를 담당하던 '간사'도 없어졌다.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은 봉쇄됐다. 비록 대변인이 국정 현안을 소상히 파악해 브리핑 할 수 있는 실력이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기자들의 출입에 관한 한 이른바 '백악관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 것이다. 기자들은 대

변인의 브리핑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긴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취재 시스템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다만 대통령 참석 행사를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 취재하는 '풀기자' 시스템은 유지하고 있다. 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 이 '풀기자'들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는 수석비서관이나 장관들을 상대로 현안을 질문해 그 답변을 동료 기자들에게 전달한다. 이 정보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통해 즉시 전 언론사에 전달된다.

이처럼 현장 접근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전화를 통한 취재의 중요성이 전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청와대의 모든 전화는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 평소 모두 감청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와대 당국자들은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자들 처지에서는 취재원이 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분위기'라도 소중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취재원에게 전화를 걸어 '감'을 잡는 데 달통한 사람들이다. 평소 그 취재원과 충분한 '신뢰'를 쌓아야 함은 물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자실 구성 및 비서실 취재뿐 아니라, 청와대의 언론 통제 관행도 크게 바뀌었다. 노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2월에는 이미 2001년의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의 여파로 정권과 언론의 '거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였다.

몇몇 보수 언론은 노무현 정권을, 김대중 정부에 이어 타도해야 할 '적'으로 상정했다. 더구나 노 대통령



개인은 그들이 보기에 이른바 ‘대통령감’이 안되는 비주류 출신이었다.

그런 환경 탓인지, 청와대는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지도,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건 신문 가판 구독을 아예 중단했고, 다른 정부기관도 가판 구독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중단시켰다.

“비판하려면 해라. 기사와 관련해 사전 부탁을 하지 않겠다. 기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언론에서 져야 한다. 우리는 법대로 대처한다.” 노무현 정부의 대언론관, 대기자관을 압축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정권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깨고 서로 제갈길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자들의 대통령 및 청와대 비판이 김영삼·김대중 정부에 비해 매우 자유로워졌고, 그 대신 보도 내용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졌다. 각 언론사 기자들과 데스크들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련 기사를 쓸 때는 청와대의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이나 소송에 대비해 사실 관계를 매우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연고주의 취재 관행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 지금도 연세대 등 특정대학 출신들이나 부산 경남에 연고가 있는 기자들이 취재원 접근에 좀더 수월한 편이다. 사실 연고주의는 한국 사회의 ‘수준’과 관련된 문제다.

### 세무조사 후 로비스트에서 자객으로

과거 청와대는 언론사에 기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언론가는 한 번 담당해 보고 싶은 ‘꿈의 출입처’였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까지 회사 안에서 가장

‘유능한’ 기자들이 청와대를 담당했다. 특히 사주가 있는 신문사의 경우 기자로서 능력도 능력이지만, 사주의 신임이 중요한 선발 요인이었다. 정권의 향배를 빨리 읽어내 회사에 보고해야 하는 ‘침병’의 책무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지고 있었다. 때로는 회사나 회사 간부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정치부장으로, 편집국장으로 승진했다.

김대중 정부 초반까지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하지만 2001년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세무조사로 사주가 구속됐던 몇몇 신문사의 경우 김대중 정부와 가까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회사의 눈총을 받거나 아예 한직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더이상 로비스트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권의 약점을 잡아내 타격을 가하기 위한 ‘자객’의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과거 군사 정권과 협력적 관계를 맺어왔던 이들 언론사는 이번에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몇몇 언론사의 이런 분위기는 언론계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언론과 정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적이었다.

### 청와대 기자의 위상 추락

정권과 언론의 관계가 적대적이면, 청와대 기자들의 위상도 추락하게 돼 있다. 청와대의 ‘대접’은 고사하고, 취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가 쓰지

대통령 기사는 찬양 일색이었다. 잘못된 일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도 대통령 기사는 합부로 쓸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사는 더 가혹하게 쓰는 추세다.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 비판하는 사례도 많다.

않은 기사나 사설에 대한 취재원들의 '항의'까지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더 이상 선망의 출입처가 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출입처를 떠나려 한다. 하루 종일 춘추관에 갇혀서 수시로 쏟아지는 브리핑을 들어야 하고, '특종'을 할 기회도 별로 없는데다,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의 특혜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언론사 데스크들은 기자들의 청와대 직접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그런대로 안면이 있는 기자를 교체하면 새로운 기자가 취재원들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자들은 떠나려 하고, 데스크는 붙잡아 두려 하고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군사 정권 시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쓰는 대통령 기사는 찬양 일색이었다. 뭔가 잘못된 일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기사는 합부로 쓸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그 사정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과의 구분이 거의 없어졌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사는 더 가혹하게 쓰고 있는 추세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 비판하는 사례도 많다. 대통령에 대한 보도 태도가 달라진 것은 취재 관행보다는 정치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언론의 청와대 취재 관행 및 대통령에 대한 보도 태도는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정권

의 대언론 정책, 언론사 스스로의 자기 발전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권과 언론의 관계가 '통제'와 '폭압' '유착' 등 몇 개의 단어로 상징되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정권과 언론의 관계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지금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정치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새 로 나 온 책

# 일주일만에 나도 사진기자

이정세 지음



문화일보 사진부의 이정세 기자가 쉽게 풀어쓴 사진촬영 가이드북이다. 특히, 최근 기술변화에 맞게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해 초보자들이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제목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디지털카메라의 기초부터 활용까지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서문에서 언론환경 변화에 따라 "모든 기자들이 쉽게 사진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책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도서출판 밝, 문고판 206쪽, 값 9,000원〉